

‘DMZ 평화마을’ 부지 매입비 편성 요구

고성군 지난 6일 주민설명회 개최… 군 관계자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 노력”

고성군이 국도비와 군비 등 743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이 추진한 지 5년이 경과하도록 부지 매입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추진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오후 3시 명파리마을회관에서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당초 예산에 부지 매입비 10억여원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고성군 관계자는 “국비 285억원과 도비 85억원, 군비 211억원, 민간자본 등 총사업비 743억원을 들여 현

내면 명파리 148-1번지 일대 11만9,313㎡에 오는 2020년까지 ‘명파 DMZ 평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9월 최종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다시 열게 됐다”며 “이 사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가장 중요한 부지 매입비를 고성군이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며 “도대체 언제부터 공사를 하는지와 토지보상은 언제 하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당초 예

산에 부지 매입비 편성을 요청했으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부족해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부서에서 책정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제외시켰다면 고성군이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으며, 군 관계자는 “2~3억 정도는 책정할 수 있겠지만, 전체 10억여원을 책정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편성 자체를 못



지난 6일 오후 3시 명파리마을회관에서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군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함형완·홍봉선 군의원도 “1회 추경에 고성군이 부지 매입비를 편성하면, 의원들 가운데 반대할 사람

이 없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라며 고성군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명파 DMZ 평화마을’ 추진과정·주요 내용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성군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5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2만3743㎡ 부지에 해변휴양지구와 가족휴양지구, 명파 저잣거리 등을 갖춘 명파 DMZ 평화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 산림보존임지여서 산림청이 공공용 이외에는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수정해 명파리 148번지 11만9313㎡에 대해 743억원을 들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6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이 사업은 1 단계로 126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기반시설 공사를 하도록 계획했으나, 현재 부지 매입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명파 DMZ 평화마을 사업은 3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들여 명파 해변 인근에 건립한 비지터센터와 농산물 판매장 1동을 포함해 전통거리촌과 숙박단지를 조성하는 평화마을이 중심축이다.

또 국토해양부가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명파 역원마을 조성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평화생명지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북한민속마을’과 ‘국도횡단 웰컴센터’도 201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명파 DMZ 평화마을을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먹거리촌은 물론 명파마을의 역사와 여행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문화체험장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사업 완료 후에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지 미지수이며,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리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군비 예산을 쪼먹는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그러나 이미 두 차례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 현지 주민들은 기본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한 상태다. 주민들은 이제는 실제 착수만이 남아 있으며, 이에 앞서 토지 보상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구독 및 광고 문의
☎033-681-1667

국회사무총장 의정연수원부지 시찰



윤원중 신임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7일 오후 3시 토성면 도원리 국회의정연수원 건립부지 일대를 현지 시찰하고, 의정연수원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성수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장이 의정연수원 개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고성군 착한가격 업소 모집 4월 10일까지…개인서비스업소

고성군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과 물가인상 억제분위기 확산을 위해 4월 10일까지 ‘착한 가격 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 업소란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다른 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요금 관련 업소가 대상이다.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되면 착한가격 모범업소 표찰부착과 함께 쓰레기봉투를 지원받게 되고,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및 금융권 대출금리 혜택 등을 받게 된다. (문의: 680-3377)

7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고성군, 오염방지 재원으로 사용… 일부 주민들 “어려움 외면” 반발

고성군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오염방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대상은 공업용과 생활용 지하수 중 일반용이다. 농어업용 및 생활용 지하수중 가정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등은 제외된다. 부과금액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월 30일 부과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유량계 미설치 시설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고성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기로 했다”며 “유량계가 없는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이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수도물 사용료도 못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수 이용 부담금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